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5월 7일(일) 총 5매	
담당 부서	행정체제혁신과	담당자	• 개편기획팀장 김예은 ☎440-3301 • 담당자 이영란 ☎440-33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해당 지역주민 84.2%가 찬성
 - 중·동·서구 주민 4,513명 대상 설문 및 여론조사 실시, 대다수 공감 -
 - 6월 초 의회 의견 청취 거쳐 정부에 건의, 21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 목표 -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선 8기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중·동·서구 지역주민 4,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4,493명 중 84.2%(3,782명)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가칭)제물포구와 (가칭)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가칭)서구와 (가칭)검단구로 개편해 1995년도 확정된 2군·8구의 현행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생활권 차이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그동안 주요 사회단체장 및 주민 설명회,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국회 및 지방의회 보고 등 지역주민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약 100여 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대표성 있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중·동·서구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지역주민 2,413명(중구 594명, 동구 605명, 서구 1,2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동별로 약 50명씩 참여했다.

또, 여론조사는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중·동·서구 주민 2,100명을 대상(중구 600명, 동구 500명, 서구 1,000명)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 신설 구(區) 명칭에 대한 의견 등이다.

설문 및 여론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찬·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4,493명 중 중구 83.1%(내륙 68.7%, 영종 97.5%), 동구 78.6%, 서구 87.5%(남부 84.9%, 검단 93.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중구 81.1%(내륙 70.7%, 영종 96.6%), 동구 78.6%, 서구 91.8%(남부 90%, 검단 96.3%)가 찬성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중구 85.2%(내륙 65.7%, 영종 98.1%), 동구 78.6%, 서구 82.4%(남부 78.3%, 검단 90.5%)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중구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탄력받을 것 같아서” (내륙), “생활권이 달라서 행정서비스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 (영종), 동구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탄력받을 것 같아서”, 서구는 “인구 증가에 따른 미래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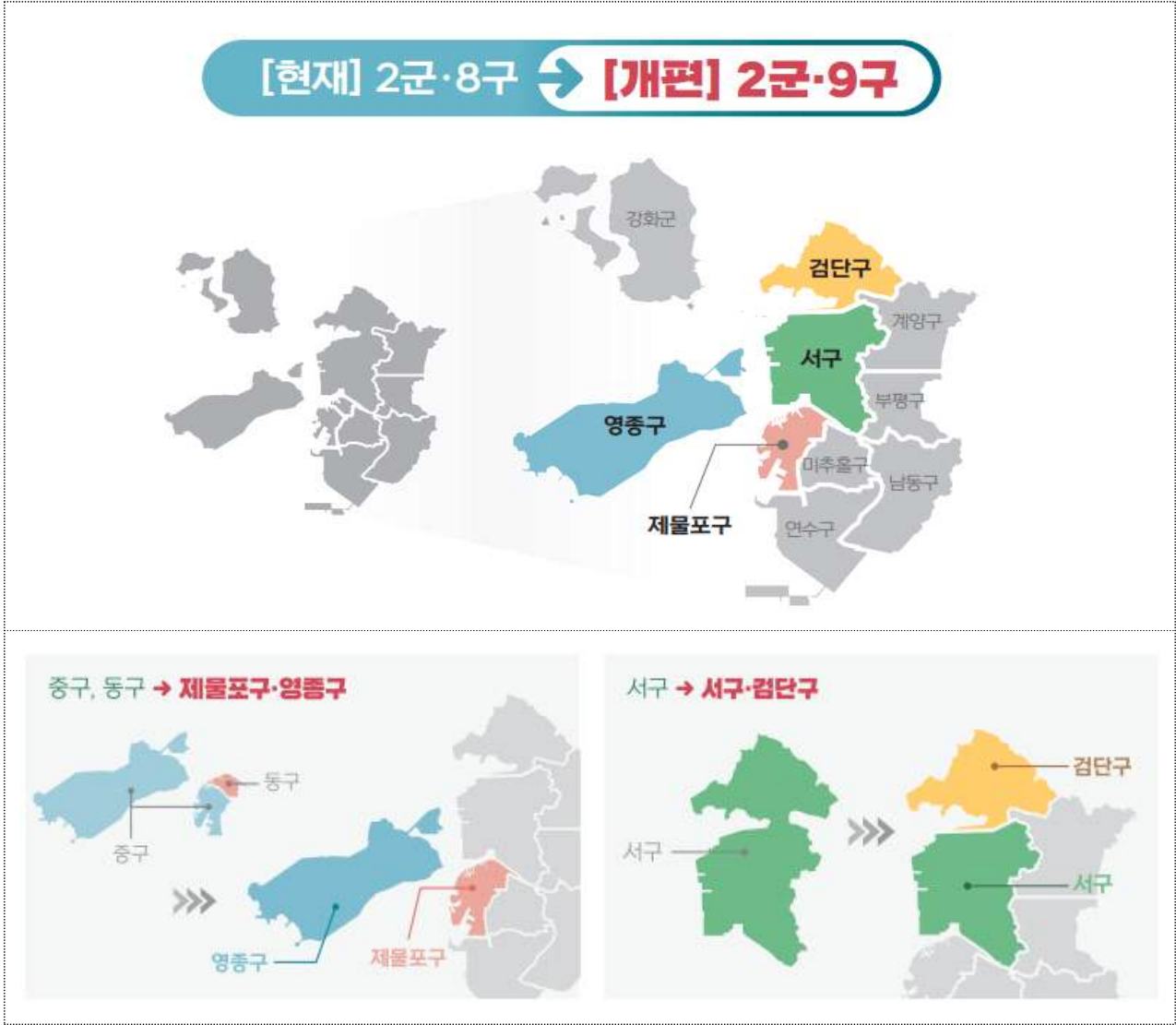
개편되는 자치구(區) 명칭에 대해서는 「제물포구」 명칭에 대해 중구 내륙 61.4%, 동구 73%, 「영종구」 명칭에 대해 중구 영종 90.3%가 선호했으며, 「서구」와 「검단구」 명칭에 대해서는 서구 85%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번 설문 및 여론조사를 통해 중·동·서구 주민 대다수가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6월 초까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구의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 제정을 목표로 개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지지는 향후 행정안전부 검토와 법률 제정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힘을 실어주신 지역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

<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청사진 >



□ 조사개요

- (설문조사) '23. 4. 13.~17.(3일간) / 방문민원 서면조사 / 3개구민 2,413명*
 - * 중구 594명(내륙 359명, 영종 235명), 동구 605명, 서구 1,214명(남부 861명, 검단 353명)
- (여론조사) '23. 4. 24.~5. 2.(9일간) / 일반전화 조사 / 3개구민 2,100명*
 - * 중구 600명(내륙 239명, 영종 361명), 동구 500명, 서구 1,000명(남부 664명, 검단 336명)

□ 조사결과

< 개편 여부 > : 전체 응답자 4,493명 중 3,782명(84.2%)이 찬성

- (중구) 응답자 1,186명중 찬성 83.1%(내륙 68.7%, 영종 97.5%) / 반대 16.9%
 - 설문조사(586명) : 찬성 81.1%(내륙 70.7%, 영종 96.6%)
 - 여론조사(600명) : 찬성 85.2%(내륙 65.7%, 영종 98.1%)
- (동구) 응답자 1,103명중 찬성 78.6% / 반대 21.4%
 - 설문조사(603명) : 찬성 78.6%
 - 여론조사(500명) : 찬성 78.6%
- (서구) 응답자 2,204명중 찬성 87.5%(남부84.9%, 검단93.4%) / 반대 12.5%
 - 설문조사(1,204명) : 찬성 91.8%(남부 90.0%, 검단 96.3%)
 - 여론조사(1,000명) : 찬성 82.4%(남부 78.3%, 검단 90.5%)

< 명칭 선정 > :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 (중구)
 - (내륙) 응답자 585명중 제물포구 359명(61.4%) 선호
 - (영종) 응답자 595명중 영종구 537명(90.3%) 선호
- (동구) 응답자 1,077명중 제물포구 786명(73.0%) 선호
- (서구) 응답자 2,180명중 서구·검단구 1,852명(85%) 선호